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302
----------	------

제출연월일 : 2024. 7. 26.

제 출 자 : 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중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제10호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체납에 따른 검사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징수비용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 징수유예 취소 또는 남은 체납액의 일시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 ④ (생략)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후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후담금----- ----- -----.
제31조(수질개선후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후담금(이하 “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② 후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

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

보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

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

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 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

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

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

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

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삭 제>

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삭 제>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삭 제>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  
-----  
-----  
-----  
-----

<p>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6. ~ 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0. (생략)</p> <p>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 --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4항---</p> <p>6.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9조(벌칙)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

11. ~ 19. (생략)	11. ~ 19. (현행과 같음)
----------------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질개선부담금을 수입으로 활용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연간 약 60억 수입 감소  
 - 이 부족분은 환특 R&D 사업을 조정하여 지출을 약 60억 줄일 계획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출	○ 환경개선특별회계	△6,000	이하 좌동					△6,000
	소 계(A)	△6,000	이하 좌동					△6,000
수입	○ 환경개선특별회계	△6,000	이하 좌동					△6,000
	소 계(B)	△6,000	이하 좌동					△6,000
총 비용(A-B)		-	-	-	-	-	-	-

### II. 재정수반요인 : 먹는물관리법 상 수질개선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제31조(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가능

###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가	

### < 비용추계 총괄 >

(단위 : 백만)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합 계	6,195	6,251	6,307	6,364	6,421	6,479	6,537	44,554
환경부	6,195	6,251	6,307	6,364	6,421	6,479	6,537	44,554
지자체	0	0	0	0	0	0	0	0

### < 항목별 비용 추계 >

(단위 : 백만)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합 계	6,195	6,251	6,307	6,364	6,421	6,479	6,537	44,554
환특세입 감소분	6,195	6,251	6,307	6,364	6,421	6,479	6,537	44,554
지자체 감소분	0	0	0	0	0	0	0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개정법률은 2025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1조)

-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되는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

나. 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상한액 신설은 비용추계에서 제외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하였으나, 가산금의 부과규모가 작고, 가산금의 부과액수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

다. 기타 예측 불가능한 가산금·체납액은 비용추계에서 제외

- 2023회계연도에 부과된 가산금(663백만원) 중 결손처리 필요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과액은 약 3.9%으로 가산금 부과 사례가 적으며, 가산금 부과는 영업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 2024 회계연도 기준 분할납부 또는 미납될 수 있는 부담금, 가산금 및 체납액은 유예 규정을 두어 향후 「지하수법」 상에서 부과·징수토록할 예정임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수질개선부담금(환경개선특별회계)이 지하수이용부담금(지자체 회계)으로 통합되면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입결손 발생(이에 환특사업 조정하여 보정 예정임)

#### < 수질개선부담금 전체 및 환경부 추계액 >

(단위 : 백만)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전체 징수액	15,489	15,628	15,769	15,911	16,054	16,198	16,344	111,393
환경부 세입	6,195	6,251	6,307	6,364	6,421	6,479	6,537	44,554

### IV.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강경민	강명화	윤은정	이승환

- 대표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명화	044-201-7179	aziyo@korea.kr

[별지 제3호서식]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 환특)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약60억)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 <항목별 재원 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기타						
<합 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 환특)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약60억)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중앙정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합 계 >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환경개선특별회계 감축 부분(약60억)에 대해서,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 환특)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약60억)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조달

####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변동 없음

####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 변동 없음

### Ⅳ. 부대의견

- ☐ 해당 없음

###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4.5, 7월	먹는샘물 관련 지자체	- 통합하지 않아도 되나, 기재부 등의 부담금 개편 방향이 이러하면 이견 없음

### Ⅵ. 작성자

-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강경민	강명화	윤은정	이승환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명화	044-201-7179	aziyo@korea.kr